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수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손기웅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조정현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CONTENTS

제8권 1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3년 9월

발 행 2013년 9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8

(팩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오름

전화 02-585-9122, 9123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8
- 3. NGO 및 기타 10
- 4. 분석 및 평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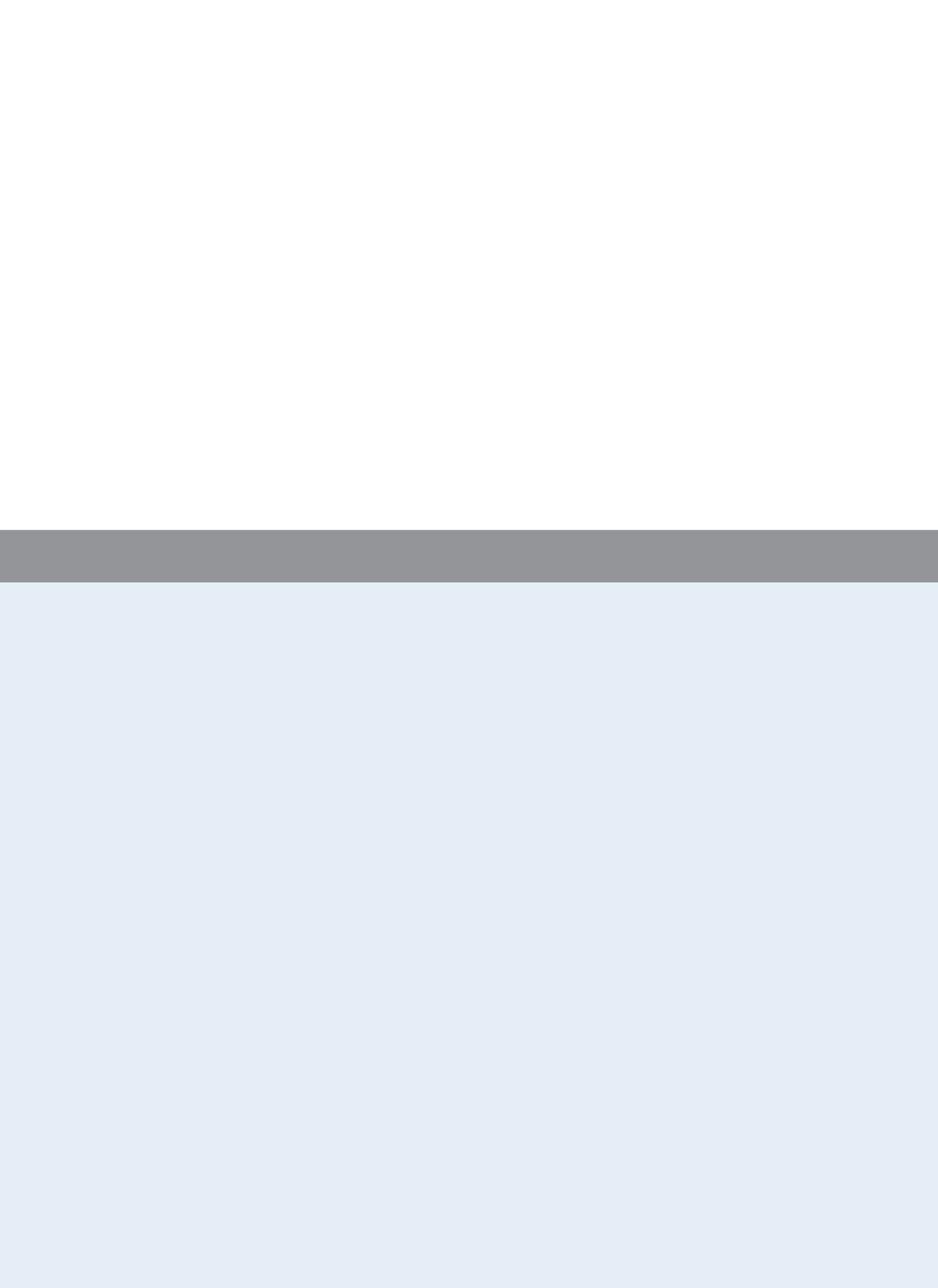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23
- 2. 일본에 대한 반응 24
-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4
- 4. 남한에 대한 반응 25
- 5. 분석 및 평가 29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33
- 2. 납북자 52
- 3. 국군포로 54
- 4. 이산가족 55
- 5. 분석 및 평가 56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8
3. NGO 및 기타	10
4. 분석 및 평가	17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북한아동복지법 발효

- 「2012 북한아동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1.14)
 - 미국 상원은 2012년 12월 28일 동 법안을 반대 없이 가결하였고,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2013년 1월 1일 동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북한아동복지법은 재외 탈북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는 권고를 포함
 - 재외 탈북 아동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재외 탈북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탈북 어린이들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인권상황 세계 최악”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Edward Randall Royce)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2 북한아동복지법」 서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도주의에 대한 도전(humanitarian challenger)은 세계 최악”이라고 발언(1.15)
 - 북한 주민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권 아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다고 지적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 지지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 인권위반 상황 조사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2.14)

미국 국무부, '2012 연례 국제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2)' 발표

- 미국 국무부는 '2012 연례 국제 인권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평가
 -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 지속(4.19)
 - 탈북자들이 재판 없이 처형되거나 실종, 임의적 구금, 또는 수용소에 계속 수감
 - 주민들의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가 계속 유린되고 있고 정부가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평가
 - 노동권, 특히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 강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13 연례 종교자유 평가 보고서' 발표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3 연례 종교자유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15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4.30)
 - 종교활동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물론 은밀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체포와 고문, 처형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
 - "미국과 동맹국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도주의, 종교자유, 인권 등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정치·경제·외교적 지원과 이런 분야를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

미국 북한인권특사, 북한인권 세미나 기조연설(5.21)

- 로버트 킹(Robert R. King)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동아시아연구원 이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북한정책 컨퍼런스'에서 주한 미국 부대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노출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미국 국무부,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 발표

- 미국 국무부는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5.20)
 -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고 평가

- 북한의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관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

미국 국무부, '국제 교도소 실태 보고서(Report on International Prison Conditions)' 제출

-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국제 교도소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대표적인 '수감자 학대 국가' 중 하나로 지목(5.22)
 - 북한정권은 정치범 처벌 수단으로 수감자를 위협하거나 모멸감을 주고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에게 대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

나.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

유럽연합, 북한인권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 강조

- 유럽연합(EU)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이 자국민을 조직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2.27)
 -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 외교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를 받아왔으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

캐나다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조사 지지

- 캐나다 외교부 차관은 캐나다 의회에서 유엔 조사기구 설립 등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에 지지 입장을 표명(2.15)

캐나다 하원, 북한 핵·인권 규탄 동의안 채택

- 캐나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디팍 오브라이(Deepak Obhrai) 외교부 의회담당 차관 겸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3.18)

일본, 유엔에 북한인권 위반 조사 촉구

-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정치범 처형과 고문 등을 포함한 인권 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2.27)

영국 외교부, '2012 연례 국제인권-민주주의 보고서(2012 Annual Human Rights and Democracy Report)' 발표

- 동 보고서에서 2012년 북한의 인권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4.15)
 -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 유린과 정치범수용소, 독립적인 사법권 부재 등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북한에 계속 만연돼 있다고 지적
 - 효율적인 식량 생산과 지방에 대한 공급 체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자원을 오락시설 확대에 주력
 - 다만 북한 노동당과 보안당국의 일부 중간 간부들이 2012년 11월 영국에서 영어와 문화를 배우며 영국의 정치와 사법제도, 매체환경 등 인권 분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
 - 북한은 영국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에 처음으로 선수를 파견하는 등 장애인 환경 개선에 영국과 일부 협력

유럽연합, EU-중 인권대화에서 북한인권 우려 표명

-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럽연합-중국 인권대화(EU-China Dialogue on Human Rights)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에 대해 문제제기(6.25)
 - 캐서린 애쉬턴(Catherine Ashton) 외교안보고위대표는 성명에서 강제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지적

다. 한국

「북한인권법안」 발의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3.29)
 - 법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

대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

- 여야의 입장차이가 극명하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은 제외

- 심윤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6개를 기록
 - 윤상현 의원(2012.6.1), 황진하 의원(2012.6.15), 이인제 의원(2012.8.20), 조명철 의원(2012.9.5), 심윤조 의원(2013.3.29)이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심재권 의원은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을 대표발의(2012.11.15)
 - * 정청래 의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11.19 대표발의)을 포함할 경우 19대 국회의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은 모두 7개

여야 원내대표, 북한인권법 제정 시각차 표출

-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 주장(6.4)
 -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안·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선전 효과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 표명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지속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 단일법안을 만들자”며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1.3)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인권포럼과 통일미래포럼 공동 주관으로 열린 ‘역사적·시대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3.19)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공청회 개최(6.26)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인권법 공청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제화 등 각론에서는 이견 노출
 -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북한 주민 인권개선 효과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견해 표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황우여 상임 공동의장은 2013년 내에 유엔 산하에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에 발송(2.1)
- 하태경 의원은 ‘유엔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 지지 결의안’ 제출(2.26)
 -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이번 결의안에 대한 찬성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의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
 - 결의안에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 등 새누리당 주요 지도부 인사를 비롯해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
- 정부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사실조사 메커니즘 설립을 포함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2.27)

통일연구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책자 발간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북한 내 5개 정치범수용소에 최소 8만 명, 최대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3.4)
 - 수용소의 폐쇄 및 이전, 규모 축소 등에 따른 변화와 열악한 수용소 환경 및 장기간 강제노동에 따른 사망사고 증가 등을 수용자 감소 원인으로 지적

2. 유엔과 국제협력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 나바네팀 필레이(Navanethem Pillay) 유엔 최고인권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한(deplorable)’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1.14)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47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2.1)
 - IPCNKR은 2003년 제3국 내 탈북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으며, 전 세계 60여 개 나라 20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

-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천명(2.5)
 -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체계적인 인권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권고
 - 인권 탄압 형태로 정치범수용소와 식량을 통한 주민 통제 등 9가지 유형을 거론
-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3.21)
 -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COI 설립을 규정
 -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결의(A/HRC/RES/22/13)는 <부록> 참조
-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이클 커비(Michael Donald Kirby, 호주 전 대법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등 세 명의 조사위원을 임명(5.7)

유엔 기구,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 유엔개발계획(UNDP)은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등을 종합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연례 보고서를 발표(3.14)
 - 전 세계 186개국의 종합순위를 매긴 보고서에서 북한은 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북한을 포함해 마셜군도와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별도로 구분해 일부 통계자료를 공개
 -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69세, 출생아 10만 명 당 산모의 사망 수인 모성 사망률(2010년)은 81명, 청소년(15~19세 여성) 1천 명 당 출산율(2012년)은 0.6명, 유아사망률(2010년)은 1천 명 당 26명, 5세 미만 아동 사망률(2010년)은 1천 명 당 33명
-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사무소(Resident Coordinator's Office: RCO)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 주민 1,6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영양과 식량, 건강, 수질, 위생, 농업 부문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3.27)
 -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도 매우 취약해,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발육부진은 28%

에 달했고, 특히 양강도의 경우 40%에 육박한다고 지적

- 유엔의 ‘영양조사 보고서(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는 북한의 2세 미만 아동 3분의 1이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다고 지적(3.19)
 -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2009년 조사 때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
 - 발육장애의 비율이 3년 전에는 3명의 1명꼴인 32.4%에서 지난해 4명의 1명꼴인 27.9%로 떨어졌으며,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은 체중미달아의 비율도 20%대에서 15%로 감소
- 세계식량계획(WFP)은 5세 미만 북한 영유아의 27.9%인 47만 5,868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발표(3.19)
 - 2009년 조사 때의 32.0%보다는 다소 개선
 - 2012년 10월 한 달간 평양을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7,649가구를 대상으로 북한 중앙통계국의 협조를 받아 진행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3 식량농업백서-영양개선을 위한 식량체계’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세 명 중 한 명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 상태로, 동아시아 지역 어린이의 발육장애 비율인 8.5%보다 4배 높은 32.4%라고 발표(6.4)
 - 북한 전체 어린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32%가 빈혈이며, 야맹증과 여러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타민A 부족으로 조사된 어린이도 전체의 28%에 해당

3. NGO 및 기타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발간〉

오픈도어스, ‘2013 월드워치 리스트’ 발표

-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11년 연속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1.8)
 - 특히 “기독교인들은 체포, 구금,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15호 정치범수용소에는 6천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돼 있다”고 비판

- “이런 심각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지하 교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

프리덤하우스, ‘2013년 세계 자유 보고서’ 발표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13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 최악의 국가로 분류(1.17)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등을 근거로 북한을 수년째 계속 최악의 국가로 지목

휴먼라이츠워치,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북한을 포함한 9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에 오른 뒤에도 끔찍한 인권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1.31)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 종교자유 백서’ 발표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2012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경책을 봤다는 탈북자가 2011년 이후 크게 증가(2.14)
 -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2011년 이전에는 4.1%(90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엔 8%를 상회

국제엠네스티, ‘2012년 세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보고서’ 발표

-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2년 세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보고서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2)’에서 적어도 6건의 사형이 2012년에 집행되었다고 보고(4.10)
 - 반국가범죄(crimes against state)로 사형을 실시
 - 수사, 재판, 선고 없이 초법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법률상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
 - ‘북한의 인권 위기’ 문답집(4.9)에서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수백 명의 관리들이 처형됐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보고서 발표

- 세계 197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2년 언론자유 환경을 조사한 프리덤하우스의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은 96점을 받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5.1)
 - 다만, 정권의 검열을 피해 DVD 등 외부 정보를 유입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 북한 내 외부 정보의 유입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

FIDH, '북한 내 사형' 보고서 발표

- 국제인권연맹(FIDH)은 '북한 내 사형(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선노동당 최고위층의 결재 없이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표명(5.17)
 - 1990년대 후반의 사형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형이 대량으로 이뤄지며, 공개처형·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사형을 경범죄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FIDH는 정치범수용소 내의 처형을 중단할 것,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를 국제사회에 상세히 공개할 것, 형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모든 수감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것,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재판을 인정할 것, 국제인권매커니즘을 준수할 것 등을 북한당국에 권고

북한, '실패한 국가' 지수 세계 23위 기록

-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은 2005년부터 매년 정부 통제력, 인권, 치안, 경제 상황, 외세 개입 등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불안정 정도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 발표(6.27)
 - 2012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실패한 국가 지수(The Failed States Index)'를 평가한 결과 북한은 95.1점을 받아 23위를 기록

〈북한 정치범수용소 변화 실태 보도〉

-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보위부 산하 정치범수용소의 일부가 폐쇄되고 통합되는 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도(데일리안, 1.18)
 - 국경지대에 있는 화령 22호 관리소가 없어지고 수용자들이 명간(화성)에 있는 16호 관리소 등으로 분산 배치
- 개천 정치범수용소(14호 수용소) 옆에 새로운 강제수용시설 설립 사실 보도(데일리

NK, 1.21; 월스트리저널, 1.21; 연합뉴스, 1.22)

* 새로운 수용시설은 14호 수용소의 증설이 아닌 북창 정치범수용소(18호 관리소)가 축소·이전한 시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ICNK,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유엔 산하에 북한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1.8)
 - ICNK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국제조사를 착수해야 할 시기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며 유엔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의 조속한 설립을 강조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북한인권 조사 촉구

-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1.22)
 -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엔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것도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이유가 된다고 지적

지식인 110인,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립 성명

- 국내 지식인 및 북한인권 NGO 110인이 유엔 내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위해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2.4)

〈북한인권법 촉구 캠페인 지속〉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1.24)
-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한인권법 제정 헌법소원 제기(4.25)
 -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준비위원회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 제출

- 국회가 북한인권법의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호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
-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6개 탈북자단체는 ‘북한인권법 통과 관철을 위한 탈북단체 연합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6.25)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 캐나다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조사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The Significance of the Launch of the UN COI and its Challenges Ahead)’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4.25)
- 국회인권포럼과 (사)물망초재단은 ‘유엔의 COI 설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4.29)

〈인권개선 청원 활동〉

-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40명에 대한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표명(4.30)
 - 탈북자 중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된 가족을 가진 피해자들과의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청원서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K)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ICNKK는 해당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인권회의 및 토론회〉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북한인권토론회 개최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HRNC Canada)는 토론토에서 ‘믿기지 않는 잔학성(Brutality beyond Belief)’을 주제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 실상과 대책을 토론하는 ‘북한인권토론회’를 개최(1.16)

HRNC,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미국 터프츠 대학 플래처 법률외교전문대학원 등과

공동으로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문제를 조명하는 학술회의(Human Rights in Kim Jong-un's North Korea: Is Progress Possible) 개최(4.2)

성통만사,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침해 세미나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세미나 개최(3.12)

국제인권사회, 북한인권 국제회의

- 독일 국제인권사회(ISHR: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는 제41차 연례인권회의에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 대표단을 초청하여 대규모 국제인권회의 개최(4.12)

인권위-고려대, 북한인권 개선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련 국가의 인식과 정책,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국제심포지엄’ 개최(4.30)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동베를린 인민봉기 6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유럽인의 관심이 몰리는 시점에 효과적으로 북한인권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제12차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6.17~18)

북한인권정보센터, 국내 외국인 대상 북한인권 강의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국 외교사절과 북한 관련 국제기구, 외국 언론사 기자들이 참가하는 ‘북한인권 정례브리핑 및 토론’ 모임을 개최(6.17)
 -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강의 주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출범식 및 세미나 개최

-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협의체인 전국대학생북한인권

협의회가 출범식을 열고 첫 행사로 창립 세미나 개최(6.24)

- 북한에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 북한의 인권개선에 필요한 역량 결집, 국내외적인 활동 전개, 북한인권 운동의 구심체로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 전개, 정치 이념적 편향된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국제적 인권 기준 입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활동 방침 제시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고발〉

미국의 소리 방송, 러시아 북한 근로자 5명 사망 보도

-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5명의 사망 소식을 보도 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조명(2.22)
 - 북한 정부는 주 수입원인 무기 수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거의 막히자, 최근 몇 년 사이 외화벌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대거 해외에 파견
 - 2012년 한국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은 2011년 말 현재 세계 40여 개 나라에 적어도 3~4만 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2년 근로자를 대거 중국으로 파견하면서 해외 파견 근로자 규모는 적어도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기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북한인권의 날' 제정 촉구

- 북한인권협의회는 2013년 캐나다에서의 '한국의 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와 더불어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의 날' 제정을 위한 청원서신을 연방 이민장관에게 전달(2.12)

구글 회장, 북한에 인터넷 개방 촉구

- 에릭 슈미트(Eric E. Schmidt) 구글 회장은 방북(1.7~10) 이후 북한이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천명

4. 분석 및 평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최악의 평가 지속

- 미 국무부는 각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 표명
 - 연례각국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평가
 -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
 - 국제 교도소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대표적인 ‘수감자 학대 국가’ 중 하나로 지목
- 영국 외교부는 연례 국제인권-민주주의 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오픈도어스는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박해 국가로 평가
-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 최악의 국가로 분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와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강화

-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작년에 이어 무투표로 채택
 - 열악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개선활동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방증
-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무투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인권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북한당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분쟁으로 인해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경우 평시에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 조사위원회 설립의 새로운 선례인 동시에 국제사회가 평시에 자행되는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사위원회가 동시에 북한인권 모니터링 및 조사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감시 활동 강화 전망

- 특히 반인도범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는 데 의의

북한인권 관련 법제화 지속

- 미국에서는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률로서 「북한아동 복지법」 발효
 - 북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 전개
 - 상반기 현재 새누리당 5개 법안, 민주당 2개 관련 법안 제출한 상황
 - 북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국내외 NGO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주도역할 강화

- 국내외 NGO들이 활발하게 북한인권 실태 고발 활동 전개
 -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확대
 - 북한인권 회의 및 토론회 활성화
 - 특히 반인도범죄 차원에서 책자 발간 등 정치범수용소의 실상과 변화 상황을 추적하는 활동 강화
- 조사위원회 설립이 결실을 맺게 된 데는 국내외에서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증언, ICNK 등 국내외 NGO의 연대활동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사실에서 보듯이 최근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국내외 NGO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양자대화에서 북한인권 상황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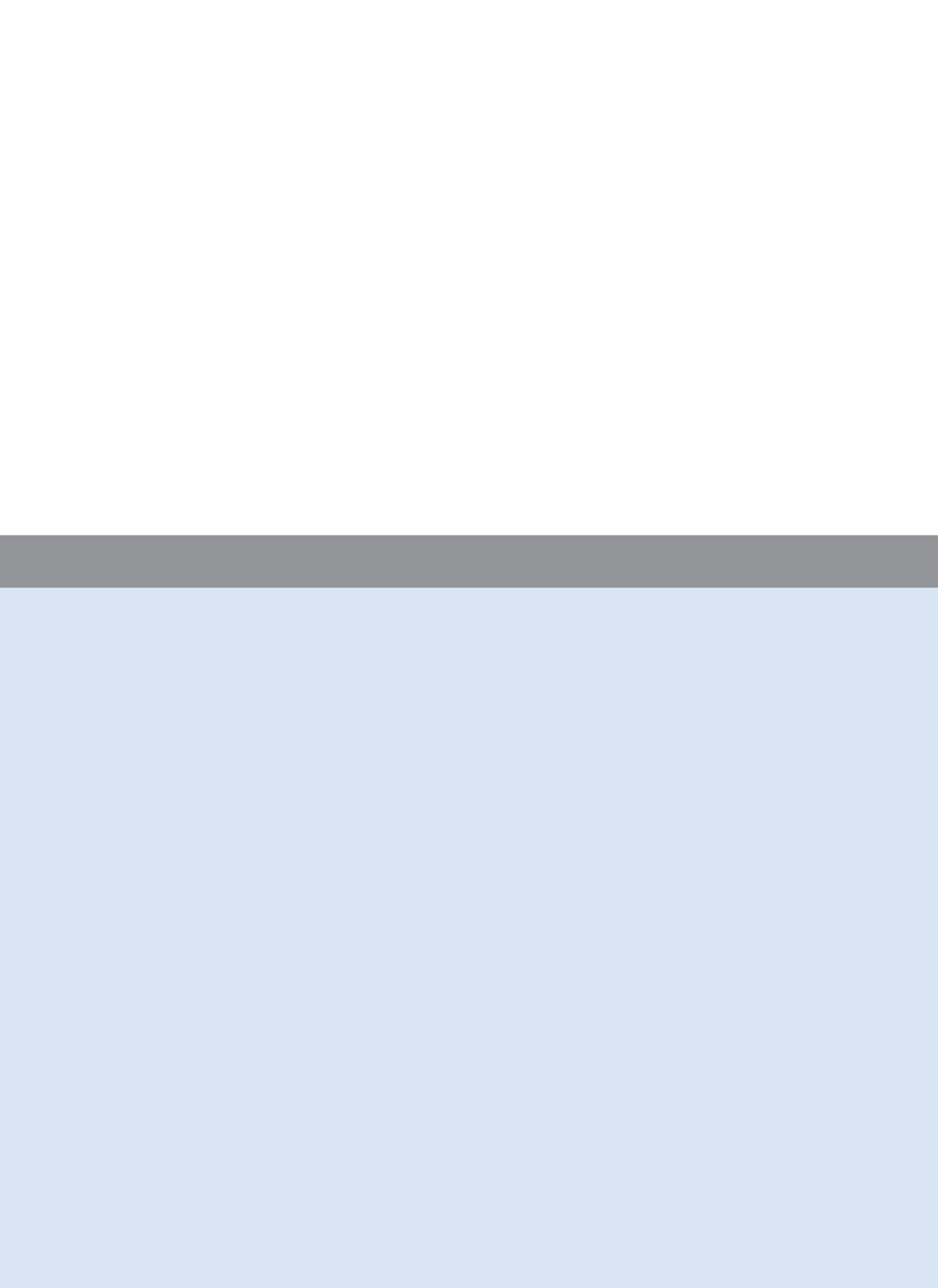
- 유럽연합-중국 인권대화(EU-China Dialogue on Human Rights)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에 대해 문제제기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수입원이 막힌 북한이 외화벌이 일환으로 근로자의

해외 파견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상

- 향후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1. 미국에 대한 반응	23
2. 일본에 대한 반응	24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4
4. 남한에 대한 반응	25
5. 분석 및 평가	29

1. 미국에 대한 반응

북한 외무성, 미국의 북한인권 지적 비난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최근 인권보고서(4.19)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은데 대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비난(4.23,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의 도구라는 데 미국의 인권보고서의 반동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비난
 - 담화는 “미국이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할수록 우리는 제도 수호를 위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우리 식대로 미국의 인권타령을 철저히 짓부셔 나갈 것”이라고 발표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데 대해 비난(5.22, 조선중앙통신)
 - “비열한 적대행위”이며 “정치적 목적에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

노동신문 등, 미국의 ‘인권유린만행’ 비난

- 미국의 북한인권 상황 발언과 관련 “관타나모 美해군기지 감옥 수감자들에게 인권 유린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4.25, 노동신문)
- “미국은 6·25전쟁에서 대중적 학살만행을 저질렀다”며 “세계최대의 살인마, 인권 유린자”라고 비난하며 “조선민족은 미국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6.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북송 탈북청소년 관련 미국 등의 ‘유인납치행위’ 비난

- 북송 탈북청소년 및 탈북자 국내 입국 관련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짜고 감행한 특대형 인권유린범죄’라며 ‘유인납치행위에 광분할수록 추악한 정체만 세계면전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왜곡 비난(6.21, 조선중앙통신)

2. 일본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등, 일본의 과거청산 요구

- 미국 뉴욕주 의원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의안’ 제출 등은 ‘일본의 반인륜적범죄 배상회피(‘고노담화’ 재검토 시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반감’이라고 ‘과거청산’ 촉구(2.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2.22)’ 행사 시 정부대표 파견 등 “독도강탈 책동” 비난 및 ‘고노담화 재검토기도 및 군국주의 고조·군사대국화 박차’ 지속 지적 경고(3.10, 평양방송)
- 일본 인권인도주의담당 대사가 유엔고문반대위에서 한 연설(일본은 인권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들 중 하나) 관련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반성도 하지 않는 주제에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이 가소롭다”고 조소(6.29,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추진 비난

- 일본과 EU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 인권 조사기구’ 설립 추진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일본과 유엔은 인권상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3.9, 조선중앙통신)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북한 외무성,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비난

-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가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3.22,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3.21)
- 외무성 대변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 채택 전면 배격’ 중통 기자 대담 (3.22, 조선중앙통신)

북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식량안보 국제적 노력 적극 기여 피력

- 북한 대표단 단장,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총회 제38차 회의 연설에서 ‘세계 식량 증산과 식량안전 보장 대책 및 북한 정부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 피력(6.22, 평양방송)
 - 세계 농업증산과 식량안전 보장을 위해 ① 매개 나라들의 자체의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증산, ② 발전도상 나라들에 유리한 국제적인 정치적 환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 보장, ③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역할 증대 등 강조

4. 남한에 대한 반응

새누리당의 북인권법 제정 노력 비난

- “북남관계를 파국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 하나의 대결악법”,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게 하고 적대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그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하고, “북인권법 채택놀음을 묵과할 경우 동족대결의 5년이 재현될 수 있다”고 위협(중통·노동신문·평방, 1.12·13·14·30)
 - “반북인권모략소동을 합법화하려는 불순한 흥계의 산물”이라고 비난(중통·노동신문, 3.22)
 - “공화국의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의 발로로서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처사, 고의적 대화파괴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중방, 6.29)

조국통일연구원, 남한 정부 비난 ‘10대 죄행록’ 발표

- ① 최고존엄 중상모독죄, ② 남북공동선언 유린죄, ③ 반공화국 핵, 미사일소동죄, ④ 반공화국 인권모략죄, ⑤ 반통일체제 대결죄, ⑥ 남북대화 파탄죄, ⑦ 협력교류 말살죄, ⑧ 통일운동 탄압죄, ⑨ 북침전쟁책동죄, ⑩ 사대매국역적죄(중통, 2.9)

노수희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선고 비난

- “반통일과 동족대결, 인권말살의 야만적 폭거,” “인권을 유린말살하고 애국적 인민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범죄시하는 최악의 파쇼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보안법 폐지를 지속 선동(중방·중통·노동신문·평방, 2.13)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조사기구 설립 동참 비난

- “동족을 해치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매국역적들에게 철추를 내릴 것”이라고 비난(중통·노동신문, 3.11)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우리 정부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기구 설립 논의 동참을 비난하면서 “남조선은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지대”라 주장하고 ‘주한미군 범죄 및 사회문제(빈곤·실업·범죄증가 등)’를 부각·선동하는 ‘백서’를 발표(중통, 3.18)
 -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반복 인권모략소동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면서 높은 적개심을 가지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면서 남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벌초 해버릴 것”이라고 위협(중통·중방, 3.24)
 - “미국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극구 편승해 나서고 있다”며 “실지로 많은 반인권 죄악을 남긴 범죄자들, 잔악한 정치투쟁이들”이라고 왜곡하며 “뎃가를 맞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통, 3.28)

이적표현물 인터넷 게재 작가 징역형 선고 비난

-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유린하는 파쇼적 폭거로서 인권유린행위이고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보안법 철폐를 주장(평방·중통·노동신문, 4.28)
 - “현대판 마녀사냥, 유신 독재 부활”이라고 시비 선동(중통, 4.29)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비난

- “공화국 체제에 먹칠을 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상태에 계속 비끄러매놓기 위한 모략 광대극”이라며 “최후결전 의지만을 더욱 억세게 다져줄 뿐”이라고 주장(중통·노동신문·평방, 5.6)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 발언(인권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비난

- “선군조선의 높은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정치적 도발”이라며 “적대의식이 골수에 짝 들어찬 대결광신자의 파렴치한 녀두리”라고 비난(중통·노동신문·평방, 5.24)
 - “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대내외적으로 반복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악랄한 범죄행위”이며 ‘동족대결망동’이라고 비난(중통, 5.28)
 - “적대감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대결미치광이의 녀두리, 고약한 망발”이라고 비난(중통·민주조선, 5.28)

남한의 인권상황 비난

- “미국의 식민지배로 남한이 최악의 인권유린시대·파쇼폭압의 난무장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반미 선동 및 ‘현 정부의 친미·유신독재부활’ 주장(중통·노동신문, 5.26)
 - “한미 당국이 북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여론화하며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체제를 증상모독하며 북침의 흥계를 꾸미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중통·노동신문, 5.27)

탈북청소년 9명 복송 사건 관련 비난

- “괴뢰패당이 나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 납치하여 남으로 끌고 가려다가 발각된 사건으로써 이번사건의 공범자, 배후자는 미국”이라며 ‘사죄와 주모자 처벌’을 요구(중통·중방·평방, 6.5)
 - 청소년들 가운데는 인신매매 거간꾼들의 쇠몽둥이에 얻어맞아 귀가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든 어린이들이 적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일체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하여 모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은 지금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이제 국가적 보살핌 속에 자기의 희망과 미래를 마음껏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남한당국의 유괴 납치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유린범죄이며, 있지도 않은 북한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모략책동이라고 주장(중통·노동신문·평방, 6.8)

라오스에서의 탈북자 국내 입국 비난

- “청와대와 현지 대사관까지 가담하여 감행된 이번 납치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유인납치와 인신매매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비난(중통·중·평방, 6.17)
 -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짜고 감행한 특대형 인권유린범죄”라며, “유인납치행위에 광분할수록 추악한 정체만 세계면전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난(중통, 6.21)

탈북자의 국내 증언 비난

- 북한 인민보안부는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한의 존엄 및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단행 결심”으로 위협
 - “우리에 대한 모략선전과 비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현 당국자들, 악질적인 보수언론 매체들도 무자비한 정의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통·평방, 6.19)

탈북자단체와 국제인권재단의 대북 전단지 살포계획 위협

-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탈북자단체(북한자유운동연합)와 국제인권재단의 대북 전단지 살포계획(6월 29일 임진각)에 “빠라 살포지점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조준타격권안에 있다”고 위협
 -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이 미국과 한 짝이 되어 또다시 우리를 반대하는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면서,
 - 미국과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은 임진각이 우리 서부전선사령부관하 부대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권안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중통·평방, 6.29)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인정 비난

- 북한의 조국전선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김규식(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에 대한 ‘6·25전쟁 납북자’ 인정(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대해 ‘조작망동’이라고 비난
 -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문제들과 함께 전시납북자 문제를 상정시켜 복잡성을 조성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해보려는 비열한 속심이 라고 주장(중통·중앙·평방, 6.28)

5. 분석 및 평가

북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비난 및 역공

-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결의안 통과, 미국의 북한인권보고서 발행 등 북한인권 관련 비판, 일본의 유엔 및 유엔의 대북 인권활동 동참 등을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이라고 비난
 - 미국에 대해서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감자들의 인권문제, 6·25전쟁 시기의 만행 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인권문제를 역공
 -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과거사 청산이나 제대로 하라며 역공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반미 정서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돌파하고자 노력

북한,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비난 및 역공

- 국내의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탈북자 입국,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동참 등을 강력히 비난하고 국내여론을 호도하여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고자 노력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동참과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비난
 - 이른바 ‘10대 죄행록’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며 국내 인권문제를 제기 하고, 탈북자 입국을 유인·납치로 규정
- 우리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탈북자 입국의 배후에 미국이 조종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반미단체, 국가보안법 반대세력과의 연대를 모색
-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악화된 남북관계의 상황을 우리의 대북 인권정책에도 원인이 있음을 부각하여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

북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 활동 비난·역공 강화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이 7월부터 본격화되고, 8월부터 한국을 포함하는 관련국에서 현지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북한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 공세가 강화
-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주요국에 대해서는 대응적인 개별적 인권비난 공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반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
- 반미 정서 국가들 간의 관련 회합도 가능

북한, 유엔을 통한 지원 획득 노력 지속

-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현 단계에서 외부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유엔기구임을 고려하여 관련 유엔활동에는 적극 협력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33
2. 납북자	52
3. 국군포로	54
4. 이산가족	55
5. 분석 및 평가	56

1. 탈북자

탈북자 자녀대상 기숙형 금강학교 설립

- 부모가 탈북한 후 중국에서 성장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기숙형 금강학교 설립(1.3)
 - 7~13세 아동이 학년 구분 없이 기초반, 한글반으로 나뉘 무료로 수업을 듣고 있으며, 국어·수학·사회·영어·음악·체육·미술 등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정서가 불안한 아동을 위해 심리치로도 병행

통일부, 탈북자 정착기본금 인상

- 통일부는 2007년 이후 동결됐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기존 600만 원(인 세대 기준 정착기본금)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1.9)
 - 이에 따라 연간 15억 원(지난해 입국한 1,509명의 북한이탈주민 기준)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

기독교 NGO, '선들러 프로젝트' 가동

- 20여 곳의 기독교 NGO들이 탈북민을 구출하고 지원하는, 이른바 '선들러 프로젝트'를 진행(1.9)
 - 현재 선들러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기독교 NGO는 에스더기도운동 외에 NK.C에바다선교회, 탈북자강제복송저지국민연합, 두리하나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방빛선교회, 기독교사회책임, 북한정의연대, 기독교탈북인연합, 북한구원운동, 탈북난민보호운동, 탈북동포회,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 탈북기독교총연합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등 20여 곳

북한, 탈북단속위해 보안원 증파

-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한파로 두만강이 일찍 얼어붙어 탈북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보안국 감찰과 보안원들이 국경지역에 증파됐다"고 보도(1.10)
 - "1월 2일부터 국경지역인 회령시, 온성군, 무산군, 경원군, 경흥군에 보안원 수십 명씩이 파견됐으며, 이들은 3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둔하면서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순찰하면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

북한, 중국서 매년 탈북자 감시 CCTV 구매

- 연합뉴스는 13일 중국 관세 당국이 집계하는 북·중간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12년 1~11월 총 1만 6천420대의 CCTV를 중국에서 수입(대략 166만 달러·17억 5천만 원 규모)(1.13)
 -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만 2천987대(245만 달러·25억 8천만 원)와 2만 2천 118대(212만 달러·22억 3천만 원)를 구입
 - 매년 수만 대의 CCTV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군이나 행정 당국의 일반적인 경비업무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탈북자 감시강화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북한 보위부, 행불자·탈북자 집중 조사

- NK지식인연대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달 10일부터 북·중 국경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행방불명되거나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고 보도(1.15)
 - “지난해 12월 각 지역 보위부에서는 한 달 동안 각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 단위로 2000년 이후 행방불명된 주민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고했다”며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
 - 김정은 제1비서는 2012년 10월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해 “우리 인민들이 적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어리석게도 탄 꿈을 꾸는 불순적 대분자들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려야 한다”고 언급

중국, “탈북여성 인신매매단 검거” 공개

- 반(半)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 지린성에서 발행되는 신문화보(新文化報) 등에 따르면 연변 조선족자치주 옌지시 공안국은 외국인(북한인) 4명과 중국인 1명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일당 5명을 체포(1.18)
 - 공안 당국은 이들이 헤이룽장성 등으로 팔아넘긴 외국(북한) 여성 12명을 찾아내 북송
 - 중국의 북한 소식통은 “김정일 사후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이후 인권단체의 탈북자 지원 활동은 크게 위축됐지만, 인신매매단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중국 공안은 탈북자가 ‘인도적 난민’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나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공개한 것 같다”고 지적

국가인권위, 중국 탈북 2세 아동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체류 탈북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아동은 15명에 불과(1.21)
 - 인권위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중국에 머무는 탈북아동 중 친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대상 아동’이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 탈북자 가족 수용소 구금’ 유엔 첫 판정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20개 언어로 출간된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의 주인공인 신동혁씨의 가족이 북한 당국에 의해 수용소에 강제 구금돼 있다고 판정(1.21)
 - 강씨는 북한에 거주하는 자신의 여동생(44)이 2011년 5월경 북한의 보위부원들에게 아들과 함께 끌려간 후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해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통해 WGAD에 제출

‘간첩혐의 탈북자 공무원은 화교’ 국내행적 집중조사

- 탈북자 출신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가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북한 화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국내 행적을 집중 조사(1.22)
 - 유씨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함경북도 청진시가 아닌 회령시 출신으로 조부와 부모가 모두 한족인 화교이며, 중국을 왕래하다 지난 2004년 입국하여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에 정착
 -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특별전형에 응모해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한 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생활지원 업무 담당

서울시, 탈북자 출신 공무원 보직 제한

- 서울시는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이 서울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개인정보망이나 네트워크 접근이 쉬운 보직에 배치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1.23)
 - “국정원 등에서 탈북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보안에 대해 약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언급

탈북자 4명, 재입북 기자회견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탈북자 김광호 부부와 그들의 딸, 탈북 여성 고경희 등 4명이 북한으로 귀환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24일 보도(1.24)
 - “괴뢰패당의 회유책동으로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공화국으로 돌아온 김광호 부부와 고경희 여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며 “지금 괴뢰패당의 비열한 모략책동으로 남조선에 끌려갔던 우리 주민들이 남조선 사회와 결별하고 공화국의 품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
 - 김씨는 “남조선은 정말 더러운 세상이었다.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
 -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북한 당국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선전체제용으로 이용하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처단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의 허구성과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다. 국경을 넘어선 그 순간부터 탈북자는 북한 체제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물인 만큼 어제 기자회견을 한 재입북 탈북자들의 처단은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1.25)

남양주시, 탈북주민 정착 지원 추진

- 경기도 남양주시는 탈북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논의할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27)
 - 조례안은 시가 탈북주민과 그 가정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취업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 문화·체육행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미국 법률회사, 탈북청소년 8명 초청

- 한겨레 고등학교 재학생인 탈북청소년 8명이 미국의 법률회사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1.24)
 - 오멜버니 앤드 마이어스(O'Melveny & Myers)의 초청으로 성사
 -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오멜버니 앤드 마이어스는 2012년 11월에 서울 사무소를 열고, 개소식 대신 탈북청소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미국 견학 기회를 제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고충 및 피해 접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28일까지 고충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발표(2.3)
 - 지원재단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과 거액의 송금 요구를 받는 경우,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국내 입국 후 브로커 비용을 갚으라고 위협 또는 협박을 당한 경우, 국내 입국 후 해외로 위장망명을 권유받거나 이 과정에서 속칭 ‘카드깡’이나 차량 구매 등 불법행위를 강요받는 경우,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단체 가입을 강요받거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보험가입 권유, 임대주택 불법 전대, 고용지원금 불법 수금 등에 대한 신고를 독려

북한 인권단체, 제3차 “탈북자 복송반대 전 세계 집회” 추진

-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2.7)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 43개 도시의 한인사회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각국의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
 - 16일까지를 ‘제1회 탈북난민인권주간’을 선포하고 탈북난민인권정책토론회,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열 예정

김정은 체제, 재입북 탈북자 200명

- 대북소식통은 “그동안 남한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탈북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200여 명으로 파악된다”며 “이 중 전영철 씨를 포함한 일부 탈북자는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데일리안, 2.8)
 - “김정은이 김정일과 달리 탈북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유화정책을 지시했다”고 언급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탈북난민인권주간 행사

-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는 탈북난민인권주간(2.7~16)을 맞아 13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탈북난민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2.13)
 - 북한인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아울러 탈북난민의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섭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간첩혐의 서울시공무원, 탈북자 정보 유출

-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서울시청에서 일 해온 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유모(33)씨를 구속 기소(연합뉴스, 2.26)
 - 보위부로 넘어간 탈북자 신원의 대다수는 유씨의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 중 수집한 것이나 50~60명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유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

북한 보위부, 탈북자 재입북 유도 강연회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유도하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3.6)
 - 주민들의 가족 및 친인척 상당수가 탈북한 것으로 보고 재입북하면 처벌하지 않고 평양시 거주권과 집까지 제공할 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회유
 - 재입북 탈북자들을 김정은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환상을 없애려는 것으로, “2012년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장군님이 너그럽이 용서해 공화국의 품에 안겨 남한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선전

현대중공업, 공채서 탈북자 우대

- 현대중공업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탈북자를 우대하기로 했다고 발표(3.7)
 - 공채에서 탈북자 출신 사무기술직 지원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생산기술직은 인원의 1% 이상을 탈북자로 채용할 방침
 - 탈북자들이 기술을 배우고자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 지원하면 지원자 전원에게 교육과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 기능인으로 육성해 취업 기회를 줄 계획

중국,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증가

- 헤이공(黑工)은 북·중 접경 일대의 ‘불법 북한 노동자’로, 탈북자 외에도 학생·여행 비자로 들어와 북·중 접경의 공장이나 식당,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증가(3.8)
 - 중국의 북한 노동자 실태를 보도한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등에 따르면, 북한 ‘헤이공’의 월급은 1,200~1,500위안(약 21만~26만 원)으로 중국 노동자 임금의 절반도 안 되지만, 일하는 솜씨는 중국 노동자를 능가해 국경 지역에서 인기
 - 북한 노동력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업체들은 북한 노동자 한 명을 소개할 때마다 입국에 들어간 비용 등을 합쳐 3,000위안(52만 원) 정도 지급
 - 수작업이 많은 의류·봉제·신발·전기부품 공장 등에서 북한 노동자를 찾는 경우가 증가

민변, 간첩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의 공무원 유모(33)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3.8)
 -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첫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과 간첩색출 명목으로 장기간 인신을 구금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고 언급

통일부, 국내입국 탈북자 감소세 지속

- 통일부는 “2월 말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 수가 206명”으로 2012년 동 기간 입국한 탈북자 238명의 84.6% 수준이라고 밝히고,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던 2012년의 1천508명보다 적을 수 있다고 전망(3.10)

서울의료원, 취업 탈북자도 의료비 면제 혜택

- 서울의료원은 정식으로 취업해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에게 계속 의료급여 1종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3.11)

중국, 탈북자 돕던 한국인 2명 체포

-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온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지난 9일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들과 함께 있던 탈북자 8명도 체포된 뒤 투먼(圖們)의 감옥에 옮겨져 복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3.12)
 -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 5명은 20대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이며 한국인 2명은 모두 여성
 - 2명 중 이번에 풀려난 1명은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먼저 석방(3.21)

중국, 탈북자 색출 포상금

-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 성 옌벤(延邊) 조선족자치주 공안 당국이 탈북자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2월 말 산하 공안 및 변방대에 포상금 액수를 적시한 내부 공문을 하달(3.14)
 - 3명에서 5명 미만의 탈북자를 신고하면 신고자가 500위안(약 8만 8,000원), 5인 이상 탈북자를 신고하면 1,000위안의 포상금을 받으며, 3월까지 신고하면 포상금을 두 배로 지급한다는 한다는 내용
 - “옌벤 주 불법 월경 범죄가 점차 창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분자의 맹렬한 기세를 꺾고 옌벤 주의 화해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 월경자에 대한 운송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하라”고 명시
 - 탈북자 색출 방식으로 이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며 “대형 여객버스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불시 검문을 진행하고,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엄히 단속하며 관련 부서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라”고 적시

IPCNKR, 탈북자 복송중단 협조 요청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3월 초 중국에서 잡힌 탈북자 8명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측에 발송(3.22)
 - “중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탈북자를 강제송환할 것이 아니라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해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도록 장더장 상무위원장과 중국인민대표대회가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

탈북자 ‘복송위협·위장망명’ 수사의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접수한 북한이탈주민 고충·피해 사례를 근거로, 탈북자들에 대한 제3국으로의 위장망명 유인이나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위협적 추심 등 불법적 행태 중 ‘죄질이 나쁘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3.24)
 - 41건의 고충·피해 사례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고충 14건, 브로커와 관련한 고충 7건, 위장망명 4건, 일반 단순 민원성 등

탈북대학생, TED웹비디오 호응

- 탈북자 이현서 씨가 미국 유명 웹사이트 TED에서 탈북 과정을 영어로 소개한 동영상이 한 달 만에 조회 수가 52만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 큰 호응(3.26)
 - 국제사회가 탈북대학생들에게 영어나 취업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탈북대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국제사회가 제공한다면 그들은 미래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 통일역군이 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

탈북 난민 4명, 미국 추가 입국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3월 한 달 동안 탈북 난민 4명이 입국했다며,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2012-2013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1명이라고 발표(4.4)
 -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57명으로 집계

탈북자, NLL 월북

- 군 당국은 2007년 3월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던 탈북자 이혁철(28)씨가 연평도에서 진흥3호(9t)를 훔쳐 3일 오후 10시 49분께 NL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발표(4.4)
 - “어선은 주간에 어업활동을 마친 후 부두에 정박한 상태였다”면서 “꽃게잡이 선원인 이씨가 밤에 어선을 불법으로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통일부, 1분기 국내입국 탈북자 전년대비 감소

-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320명(잠정치)으로 집계되며, 이는 2012년 동 기간 355명에 비해 9.8% 줄어든 수준(4.11)
 - 올해 월별 입국자 수는 1월 90명, 2월 116명, 3월 114명으로 집계

안전행정부, 북한이탈주민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가능

- 안전행정부는 16일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4.16)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미국 하원 외교위 청문회, 탈북자 증언

-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프리카, 국제보건, 인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전 솔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해 김정은 정권의 개혁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4.19)
 -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탈북 여성이 실태를 증언

수원지법, 위장탈북 여간첩 징역 4년

- 수원지법 형사1부는 19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4.19)

미국 인권특사, 탈북자 송환 중단 촉구

-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워싱턴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킹 특사는 방미 중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을 하고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4.22)
 - 킹 특사는 “탈북자 수가 2011년 이후 크게 줄고 있는데 이는 북·중 국경의 경비가 강화된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미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체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

미국 국무부, 탈북자 출신 언론인 연수 지원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자 출신 언론인 7명이 하와이 동서센터가 주관하는 탈북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4.25)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 수용소 구금 탈북자 가족 생사확인 요청

-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수용소 강제구금자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생사확인을 요청한 탈북자 20여 명과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이들의 가족·친척 40여 명의 명단을 공개(연합뉴스, 4.30)
 -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청원서를 대신 제출해줄 북한반인도범죄 철폐국제연대(ICNK)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생사확인 명단 전달 계획

탈북자 단체, “중국,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촉구”

-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복송 중단’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하고 탈북 난민 강제복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5.2)
 -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고문과 구금, 강제노역은 물론 공개처형까지 당한다면,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 난민을 복송하고 있다고 비판

외교부 장관, 탈북자 문제 최우선 순위화

-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기구 (UNHCR) 최고대표를 면담하고 “UNHCR이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꼽는 것은 탈북자 문제”라고 표명(5.15)

북한, 탈북자 3명 재입북 좌담회

- 북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왔다가 재입북한 리혁철(26), 김경옥(41), 강경숙(60)의 좌담회가 고려동포회관에서 열렸다고 보도(5.17)
 - 이들은 탈북자심문 합동센터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을 당하거나 감금당하고 위협을 받았으며 인간 이하의 갖은 모욕과 천대, 멸시를 받으면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는 과정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주장

북한, 보위부 ‘탈북자 귀환 공작팀’ 신설

- 뉴포커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위부 내 ‘해외 반탐(反探·대간첩) 업무’를 맡은 3처 내에 ‘탈북자 귀환 공작팀’을 신설하고 대남 공작을 강화(5.16)
 - 김정일 정권 때 300여 명에 불과하던 3처 인원은 현재 1,000명 가까이 늘었고, 3처가 해외 반탐의 핵심부서로 급부상
 - 국가보위부 3처는 국내 탈북자가 2만 5,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부와 연계된 북한 내 반체제 인물을 추적하고 중국 내 브로커와 탈북자 정보 수집, 납치, 유인공작을 감행
 - 탈북자 브로커를 매수하거나 협박해 북한 내 탈북 청탁을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

라오스, 한국행 희망 탈북청소년 추방

- 탈북청소년 9명(남자 7명과 여자 2명, 15살에서 23살 사이 청소년들)이 굶주림을 피해 한국으로 오려다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됐으며, 추방된 아이들은 북한으로 다시 강제송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5.28)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결같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북한)의 불법 입국자 문제를 처리한다”고 표명
 - 일부 탈북자들은 이번 라오스의 탈북고아 강제추방 과정에서도 북한 대사관과 탈북자 체포조가 직접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
 - 라오스에서의 추방과 북한 요원에 의한 신속한 호송 모두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현지 공관의 노력 부족보다는 북한 측의 이례적인 대응으로 이번 북송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 북한 인권단체들은 동 사건과 관련,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을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5.29)

휴먼라이츠워치, 탈북자 보호·처벌금지 요구

-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베이징을 통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 9명의 신변 보호를 요구(5.29)
 -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 관련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

정부, 북송 탈북청소년 ‘안전보장’ 요청

- 정부는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9명의 강제북송과 관련,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관련 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북송된 9명의 안전 보장에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5.30)

미국 국무부, “라오스 탈북자 추방 우려”

-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라오스가 9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추방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역 국가들이 자국 영토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5.30)
 -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면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

여야, 탈북자 북송 관련 정부 대응 질타

- 여야는 탈북자 9명이 라오스 당국에 의해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뒤 결국 북송된 것으로 전해진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5.30)
 - 현지 선교사가 두 차례에 걸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긴급개입 요청을 했으나 한국대사관은 이들이 수용돼 있는 동안 단 한 차례 면회도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

유엔, 탈북청소년 9명 안전보장 요구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이들의 안전보장을 요구(5.30)
 - 라오스 정부가 보호책임을 저버린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으로 재송환됐다면 북한 당국은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
 -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도 탈북청소년들의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제 관습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

새누리, 라오스 탈북자 북송 규탄 결의안 추진

-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회는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9명의 탈북 고아들이 라오스에서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라오스 규탄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6.1)
 - 결의안에는 라오스 정부가 ‘난민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재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
 -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라오스 정부에 의해 추방돼 결국 북송된 탈북청소년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결의안을 대표발의(6.8)

미국 하원외교위원장, 중국 강제북송 중단 서한

-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5.31)
 - 중국이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청소년 9명을 강제북송시킨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처형과 같은 극심한 처벌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

박 대통령, 북송청소년 생명·안전 보장 촉구

-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6.3)
 - 남북 간, 한국과 라오스 간 외교이슈로 좁게 볼게 아니라 탈북민 인권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
 - 정부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감을 촉구하고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북한인권개선모임, 북송 탈북청소년 9명 원래 미국행 계획

- 북한인권개선모임은 탈북청소년들을 안내한 주 목사가 탈북청소년들을 라오스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보내려고 계획했으나, 5월 10일 라오스 경찰에 체포되면서 한국행으로 급작스레 계획을 바꾸었다고 주장(6.3)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9명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에서 주 선교사에게 강제복송 과정을 상세하게 전달받아 최대한 신속히 청원서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
-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라오스에서 추방돼 강제복송된 탈북청소년 9명의 애초 목적지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6.3)

대북매체, 북송 9명, 평양 순안초대소 격리

- 강제복송된 탈북청소년 9명이 평양 인근 순안초대소에 격리 수용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6.3)
 - “이번에 탈북청소년들이 3국에서 체포돼 긴급호송된 것은 김정은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라오스 주재 북한대사관과 외무성 관계자들이 탈북청소년들의 체포 소식을 5월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자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병을 인도하라”고 대사관에 지시했다고 소개

중국, 탈북자 송환 관련 유엔 발언 비난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송환 탈북청소년 관련 유엔난민기구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바탕으로 무책임한 언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6.3)
 - 북한 당국이 그들을 귀국시킬 것을 요청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이들 9명은 적법하고 유효한 서류와 비자를 지니고 5월 27일 중국에 입국한 뒤 5월 28일 북한으로 중국을 떠났다고 설명

여성부, 폭력피해 탈북여성 치유센터 운영

- 여성가족부는 탈북 과정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고통을 겪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상담·심리치유 전담센터를 지정해 6월부터 지원하기로 결정(6.4)
 - 북한이탈여성의 거주 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지정한 8곳에 전문상담원 1명씩을 배치해 상담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민주당, 라오스 탈북자 북송사태 청문회·국조 추진

-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청소년들의 강제복송 사태를 포함, 탈북자 현황 및 탈북 경로를 포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제안키로 결정(6.4)

-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요청한 공청회 개최를 수용키로 하고, 북한인권법과 함께 5·24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법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며 북한인권법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제기

정부, 탈북청소년 9명 생명 보장 촉구

-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청소년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과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6.4)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번 강제북송 건을 강력히 제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라오스 외교부, 청소년 ‘정치적 망명’ 불인정

-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탈북청소년 강제송환 논란과 관련,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6.4)
 -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탈북청소년 인술을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

위장망명 시도 탈북자 적발

- 미국의 소리 방송은 경찰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위장망명을 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과 대출을 알선한 일당을 쫓고 있다고 보도(6.5)
 - 2011년 서울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탈북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법 대출로 망명자금을 마련한 뒤 관광비자를 받아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로 갔으며,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것처럼 속여 난민 신청

북한자유연합, 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

- 북한자유연합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의 중단을 요청하라고 촉구(6.5)

유럽연합, 탈북자 강제북송 비난

-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고위대표는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6.5)

북한인권 의사회, 강제북송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 북한인권 의사회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강제로 북송된 것에 대해 해외 공관의 미숙한 대응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6.6)

탈북자 18명,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이송

- 미국의 소리 방송은 탈북자 18명이 6월 4일 라오스 현지 한국대사관과 대사관저에 머물며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6.7)

북한, 북송 탈북청소년 평양 놀이공원 견학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신문·방송 등 매체들이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이 평양에서 놀이공원을 다니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해 조만간 계속해서 제기되는 북송 탈북청소년의 신변 안전 우려를 씻고, 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부각시켜 인권 개선 압박을 피하고 체제결속을 위한 선전공세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6.11)

TV조선, 탈북자 단속 동남아 총책 첫 공개

- TV조선은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을 데려간 북한 보위부 담당자의 실체를 처음 공개(6.12)
 - 라오스를 거점으로 동남아 일대를 돌며 탈북루트를 단속하는 보위부 총책임자의 이름은 김형수로 확인

탈북지원 조선족, 난민 신청 패소

- 중국에서 탈북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쫓겨 밀항 후 난민신청소송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되었던 조선족 여성이 중국 출입국기록으로 인해 패소판정(6.13)
 - 압록강변 중국 길림성 마을에 살던 이모(39·여)씨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북한 주민 약 20명의 탈북을 지원
 - 2013년 초 딸과 함께 중국에 갔다가 3개월 후 딸을 현지에 두고 혼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출입국 기록으로 인해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한 데다 딸까지 두고 온 사실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장을 내지 않아 변론 없이 내려진 패소 판결이 확정

탈북단체, 영국·캐나다 제3국 탈북 난민 수용 촉구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영국 및 캐나다 내 ‘북한인권협의회와 ‘한보이스’ 등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3국 내 탈북자들을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6.14)
 -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영국이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난민을 수용하기 때문에 탈북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

북한, 라오스 탈북자 18명 입국 비난

-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조선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라오스 ‘안가’에 머물던 탈북자 18명을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유인납치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비난(6.17)
 - “청와대와 현지 괴뢰(한국) 대사관까지 가담해 감행된 이번 납치행위는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그들에게는 북남관계 개선의사가 조금도 없고 대결적 흥심만 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난

외교부, 정부 탈북자 전담조직 강화

-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해당국 정부와 맞춤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탈북자 보호·이송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6.18)
 -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관련국의 체제와 제도에 맞는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

-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

정부, 라오스 탈북자 20명 한국 입국

- 외교 소식통은 “라오스에 있던 탈북자 20명이 최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전원 무사히 입국했다”면서 “당국의 조사를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6.17)
 - 정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안가에서 지내던 탈북자 18명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거처를 대사관으로 옮겼으며 이어 추가로 라오스에 진입한 탈북자 2명도 대사관에서 보호

북한, 북송 탈북청소년 좌담회

- 조선중앙통신은 북송 탈북청소년을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행위로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고려동포회관에서 열린 좌담회 내용을 전달(6.20)
 - 북한은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 등 방송매체로는 좌담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중앙통신은 로정영, 류철룡, 장국화, 리광혁, 정광영, 박광혁, 류광혁, 문철, 백영원 등 9명이 좌담회에 참석했다면서 이들의 이름을 공개
 - 이들 청소년은 자신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목사의 집에서 5개월~3년간 살다가 이 목사에 의해 차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었으며, 라오스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유괴돼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으며, 또 이 한국 목사가 미국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를 통해 2011년 9월 다른 3명의 탈북청소년을 한국으로 보냈고,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4명의 탈북청소년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지적
 - 통신은 이 청소년들이 “구렁텅이에 영영 빠질뻔한 자기들을 한 품에 안아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진정 자애로운 태양의 품”이라면서 납치에서 벗어나 조국의 품에 안긴 소감을 밝혔다고 보도

박 대통령, 시진핑에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제기

-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자의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6.27)

-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한국의 관심을 잘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애로사항도 더 이해해 달라”고 응답

2. 납북자

아베 총리,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 피력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피력(아사히 신문, 1.15)
 - 정부 홍보 라디오를 통해 아베 총리는 ▲모든 생존자 즉시 귀국 ▲행방불명자 진상 규명 ▲납치범 인도 등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 조건을 제시
 -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은 2012년 12월 총선 당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 및 핵·미사일 문제 조기 해결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
 - 전임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은 2012년 8월 약 4년 만에 북한과 협의를 재개하여 11월 국장급 회담 등 납북자 사안 해결을 위해 북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화가 중단

북한, 독일 및 시리아인도 납치

- 북한은 과거 독일인과 시리아인도 납치했다고 보도(2.10)
 - 일본 산케이신문은 공작원 출신으로 2002년 탈북한 탈북자를 인용하여 “독일, 시리아, 프랑스, 태국, 중국 국적자들이 북한으로 유인 및 납치된 뒤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
 - 현재까지 파악된 납북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 일본, 레바논, 태국, 루마니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요르단 등 12개국이며, 독일과 시리아가 추가될 경우 총 14개국

영국, 북한 KAL기 납치사건 청문회 개최

- 1969년 발생한 북한의 KAL기 납치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영국 의회에서 개최(3.12)
 -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납치한 KAL기 탑승자 가운데 미귀환 11명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미귀환자들이

북한에 자유의사로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제3국에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증언

전후 납북자 및 가족 유엔서 최초 증언

- 스위스 제네바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서 귀환 납북자 최옥일씨가 함께 납북됐던 천왕호 선원들의 근황을 증언(3.15)
 - 6·25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됐던 납북 피해자 4명이 유엔에서 피해상황을 증언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의 유엔 증언은 이번이 처음

정부, 전쟁 납북자 417명 추가 지정

-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납북자 417명을 추가로 결정하면서 공식적인 6·25전쟁 납북자 수는 총 1천991명(5.6)

일본, 북한에 납북문제 해결 통한 수교 제안

- 후루야 게이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제2차 북·일 정상회담 9주년인 2013년 5월 22일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수교를 도모하자는 담화를 발표(5.22)
 -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본과 북한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양국 국교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우리 측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274명 납북자 추가 인정

-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인정(6.21)
 - 274명이 추가됨으로써 6·25전쟁 납북자는 모두 2천265명
 - 추가된 인사로는 김규식 부주석 외 신용훈 전 국회의원, 구자옥 전 경기도지사, 백석기 전 서울시 교육국장, 심동구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포함

3. 국군포로

새누리,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추진

-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1.14)
 - 본 개정안은 국군포로 가족만이 탈북해 입국하더라도 국군포로 본인에게 지급될 보수 등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
 -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역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최근 5년간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된 보수 평균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포함

국회, 국군포로 송환·대우법 국회 통과

- 국회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2.26)
 - 개정안은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정부, 국군포로 현물 제공 송환 추진

- 박근혜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해 북한에 현물을 직접 주고 교환하는 ‘프라이카우프’ 방식 추진을 검토(3.28)
 -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전임 이명박 정부도 검토한 사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에 현물을 직접 지급하고 반체제 억류인사를 송환받은 방식

(사)물망초, 민간 차원 국군포로 신고센터 개소

- (사)물망초는 ‘국군포로 신고센터’를 개소(5.13)
 - ‘국군포로 신고센터’는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를 통틀어 최초이며, 신고 접수 이후 자체 확인 작업을 통해 포로명단 작성 및 생사 확인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

국회,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6.25)

- 결의안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으며, 결의안은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억류한 국군포로를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였고,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

4. 이산가족

통일부, 이산가족 생존자 평균연령 77.89세

- 통일부에 의하면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77.89세(2.10)
 - 2월 7일 기준, 정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총 12만 8천787명의 이산가족 상봉신청
 - 이 중 생존자는 7만 4천844명이며, 평균연령은 남성 77.01세, 여성 79.44세로 총 평균연령 77.89세
 - 생존자 구성은 70대는 30.16%, 80대가 40.82%, 90대는 9.48%, 100세 이상도 0.37%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80.83%

국회,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법 추진

- 정문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통해 이산가족 중 신청자에 한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24)
 - 본 개정안은 통일부가 2012년 7월 발표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중 이산가족 사후 교류추진 차원에서 추진될 유전자 보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KBS 생방송, 세계기록유산 등재 도전

- 서울시에 따르면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이산가족찾기)’가 재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5.14)
 - “이산가족찾기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아픈 근·현대사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기록유산”이며, 서울시는 “사진, 기록, 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2년 만에 이뤄지는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심사에 응할” 예정

현대경제연구원, 이산가족 사망자 매년 3,800명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800명으로 집계되며, 상봉기회를 박탈당한 채 사망하는 경우는 2,000명으로 파악(6.12)
 - 현재의 이산가족은 20~24년 후면 모두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경우는 대부분 10년 이내 사망할 것으로 전망
 -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해결하고, 생애 한 번의 만남이라도 성사하기 위한 상봉 규모는 연간 7,000명 이상으로 추산

5. 분석 및 평가

탈북자 강제북송금지 촉구 강화

- 라오스 탈북청소년의 강제북송사건을 계기로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강화
 - 미국, 유럽연합 등의 중국정부에 대한 난민보호원칙 준수 요구
 -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
- 국내 정치권에서도 재외탈북자 보호 관련 외교부 등 정부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제도보완대책 마련 촉구
 - 외교부도 관련국과의 맞춤형 협력 등 제도개선 시도
 - 탈북 브로커들의 불법 및 가혹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탈북자 재입북 기자회견 지속

- 탈북자의 NLL 월북사건 및 중국을 통한 재입국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감사표시와 남한에 대한 비판 선전
 - 북한당국은 사상교양을 통해 탈북가족에 대한 회유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재입북 탈북자를 통한 체제선전을 강화

북송 탈북청소년 활동 공개

- 북한당국은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의 신상 및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이는 라오스 당국이 미성년자의 망명신청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관련 단체들의 유인납치행위라고 규정한 입장을 강화시킬 가능성을 내포

국내입국 탈북자 규모 감소 추세 지속

- 북한 및 중국 내 단속 강화, 탈북증개인 처벌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입국 탈북자의 감소 추세가 상반기에도 지속
 - 당분간 감소 추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정부 차원 6·25전쟁 납북피해자의 생사확인 및 귀환노력 증대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총 2천265명의 납북자수를 확정하 바, 향후 공식적으로 인정된 납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사확인 및 귀환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남북 당국 간 회담 재개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문제의 조속한 해결

- 남북 이산가족의 노령화 현상 지속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가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당국회담을 재개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방안 도출 필요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미귀환 국군 포로의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United Nations

A/HRC/RES/22/13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9 April 2013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Twenty-second session

Agenda item 4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22/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Human Rights Council,

Guid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Recalling all previous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Council resolution 19/13 of 22 March 2012 and Assembly resolution 67/181 of 20 December 2012, and urging the implementation of those resolutions,

Bearing in mind paragraph 3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of 15 March 2006,

Recalling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5/1, on institution-building of the Council, and 5/2, on the code of conduct for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7, and stressing that the mandate holder shall discharge his/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ose resolutions and the annexes thereto,

Recalling also the statement made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14 January 2013 calling for a full-fledged international inquiry into serious crim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lcoming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aking note of the nine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dentified in his recent report,¹

* The resolutions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be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Council on its twenty-second session (A/HRC/22/2), chap. I.

¹ A/HRC/22/57.

A/HRC/RES/22/13

Recalling the view by the Special Rapporteur, expressed in his report,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quiry mechanism with adequate resources to investigate and more fully document the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tressing the urgent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report,

Recalling also the fact that, on 28 February 2013, a group of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jointly expressed their support for an international inquiry into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eply concerned at the persisting deterioration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continuing reports of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at the unresolved questions of international concern relating to abductions of nationals of other States, and urging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ully,

Deploring the grave,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the use of torture and labour camps against political prisoners and repatriated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urg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end those practices and to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unconditionally and without delay,

Deeply regretting the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cogniz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r to extend full cooperation to him and allow him access to the country,

Expressing its serious concern at the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rticulate, by the time of the adoption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f the outcome report of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² in March 2010, which recommendations enjoyed its support, and regretting the lack of action take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date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at report,

Alarmed by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exacerbated by its national policy priorities,

Reaffirming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its entire population, including by ensuring access to adequate food,

Recognizing that particular risk factors affect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nd the need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all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y them against neglect, abuse, exploitation and violence,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States' engaging fully and constructively wit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and with other mechanism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situation of human rights,

1. *Strongly condemns* the ongoing grave,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² A/HRC/13/13.

2. *Commend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the activities undertaken to date and his continued efforts in the conduct of the mandate, despite th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3. *Decides*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9/13, for a period of one year;
4. *Also decides* to establish, for a period of one year, a commission of inquiry comprising three members, one of whom should be the Special Rapporteur, with the other two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5. *Further decides*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 will investigate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outlined in paragraph 31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¹ including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food, the violations associated with prison camps, 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arbitrary detention, discrimination, 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ons of the right to life, violations of freedom of movement, and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in the form of abductions of nationals of other States, with a view to ensuring full accountability, in particular where these violation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6.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operate ful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to permit them and their staff unrestricted access to visit the country and to provide them with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them to fulfil their mandates;
7. *Also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full, rapid and unimpeded acces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delivered on the basis of ne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coupled with adequate monitoring;
8. *Encourages*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its specialized agencies,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mandate holders, interested institutions and independent exper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develop regular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commission of inquiry in the fulfilment of their mandates;
9.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provide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commission of inquiry with all assistance and adequate staffing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mandates effectively and to ensure that these mechanisms work with the sup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0. *Invites* the Special Rapporteur to submit regular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his mandat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o the General Assembly;
11. *Requests*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present an oral updat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twenty-fourth session and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ixty-eighth session, and a written report to the Council at its twenty-fifth session;
12. *Decides* to transmit all report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all relevant bod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Secretary-General for appropriate action.

48th meeting
21 March 2013

[Adopted without a vote.]



제8권 1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